

김치도 시로 품질·생산성 'UP'

세계김치연구소, 푸드테크 접목 절임~발효 데이터 27만건 구축 염도·숙성도 등 판정·등급화 가능 품질 신속 검사... 고품질 김치 생산

앞으로 김치산업에도 인공지능(AI)을 접목한 푸드테크 기술이 적용되면서, 품질은 물론 생산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남구에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국가 R&D 프로젝트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김치 생산공정별 비파괴 품질검사를 위한 데이터셋(Data-set)' 구축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개방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세계김치연구소, AI 기업인 ㈜카타로닉스, 디지털 분야 교육컨설팅 기관인 ㈜에스엘아이평생교육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했다.

그동안 국내 김치산업은 고품질 등으로 노동 생산성이 낮고, 자가제조 방식과 유사한 생산공정으로 과학적인 지표보다는 '경험'과 '육안'에 의존하는 등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이번 인공지능 접목 푸드테크 기술 활용으로 김치 품질 및 생산성 개선 등이 예상된다.

세계김치연구소측은 "상품용 김치의 경우 K-문화 확대로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 시장에서도 각광받고 있지만, 원료재배부터 유통단계까지 관여



세계김치연구소 연구원들이 초분광 장비를 활용해 김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세계김치연구소 제공>

하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로운 혁신기술이 필요했다"며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세계김치연구소는 배추 원료부터 절임, 발효과정에서의 데이터 총 27만건을 구축했으며, 인공지능(AI)은 초분광 이미지 등 다양한 자료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각 생산공정에서 중요한 품질지표인 당도, 염도, 숙성도(pH)를 판정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했다.

특히 이번 사업으로 확보한 데이터와 AI 모델을 활용하면 김치 제조현장에서 원료품질(수분, 당도), 공정품질(절임배추 염도), 김치 숙성도(pH,

유산균 수) 등을 판정하고 등급화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김치 제조업체는 원료부터 유통단계까지 품질을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 분석만으로 빠르고 신속하게 검사하고, 고품질 김치 생산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장해준 세계김치연구소장은 "AI 기반의 김치 생산공정별 비파괴 품질검사 모델은 상품김치의 기존 품질관리 한계를 극복하고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술 개발로 김치산업 선진화를 선도하고, 푸드테크 관련 기술이 김치 산업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업무보고, 시민에 직접 브리핑

다음달까지 총 9회... 오늘 민생·경제분야

광주시 올해 업무보고가 시민과 함께 지역 현안을 고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2월 말까지 총 9회에 걸쳐 '2024년도 업무보고'를 개최한다.

업무보고는 실·국·이 시장에게 주요 정책의 방향과 계획을 보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 수혜 대상인 시민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특히 올해 업무보고는 광주시 실·국은 물론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업무보고는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민생·경제분야를 주제로 열리며, 위니아 사태와 부동산 PF 유동성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인과 소상공인, 건설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경제난에 따른 피해업종 중점대책과 창업·실증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또 시장의 모든 정책이 서로 맞물려 이뤄지는 만큼 관련 실국이 협업해 함께 준비하고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공직자가 정확한 방향과 속도로 다같이 협업하며, 일의 경계를 넘는 행진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올 한해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한 팀이 돼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골목형 상점가' 확대 지원 필요"

광주연구원 '현안 연구' 발간... '남구·북구·광산구 6곳 뿐'

소외된 골목상권에 전통시장과 비슷한 자격을 부여하는 '골목형 상점가'를 확대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3일 광주연구원이 발간한 '현안 연구' (광주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총 6곳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전남대학교 후문·운암동 황계상가·용봉지구·매곡동 등 북구 4곳, 광산구(산정상인회)와 남구(백운대성시장) 1곳 뿐이다.

골목형 상점가는 2020년 8월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새로 추가된 상점가 형태다.

은누리 상품권 가맹점 가입과 상품권 유통, 시설개선 현대화 등 전통시장과 유사한 사업이 가능한 곳이다. 2000㎡ 이내에 30개 이상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지역이 대상이다.

한경록 광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자체들이 의지를 갖고, 상인 조직화가 완료된 상권 중에서 밀집도 요건을 충족하는 곳에 대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지정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기대 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는 등 후속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대형마트·시장 원산지 단속 다음달 8일까지... 위반업체 과태료

광주시는 "오는 2월 8일까지 대형마트, 농산물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명절선물, 제수용품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설을 앞두고 농식품·축산물 등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농산물 및 가공품 651개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및 표시방법 적정여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혼합 판매하는 행위 ▲가공품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가공지를 원산지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경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형사입건 후 검찰기소 등의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미표시했을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59개 농업 신기술 보급·기후 대응 강화

전남농기원 올 543억 투입... 스마트 기술 확산·GAP 인증 주력

전남도농업기술원이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대응 등 농업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24년 농업 분야 신기술 보급 159개 사업에 54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농업의 위기 속에 소비자들이 만족시키면서 기후변화나 탄소중립 등 전세계적인 이슈도 따라잡겠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179억원을 들여 스마트 농업기술 확산 및 친환경·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 지원 등 국가 정책사업 성과 달성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농산물 생산에 나서기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 병해충 대응은 사후관리에서 사전예방으로 병해충 예방방제 체계를 개선한다. 상시예방 및 적기방제를 위한 병해충 방제비 86억원을 지원하고 농작물 피해 최소화화 농업인 애로 기술을 해결할 계획이다.

농업 분야 폭우·폭설 등 이상기상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기상재해 정보서비스 대상 인원을 지난해

6000명에서 올해 8000명까지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비 21억원을 지원한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기존 4개소였던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올해 13개소로 확대해 지역 로컬푸드와 학교급식 납품 농산물, 생산단계 농산물의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역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업인 소득 보장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나선다.

분야별 신기술 보급을 위해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 기술보급 83개소 94억원 ▲원예작물 스마트 농업 확산 및 생산비 절감 57개소 42억원 ▲지역 특화작목 육성 33개소 74억원 ▲이상기상 대응 안전정생 46개소 47억원 ▲축산기술 분야 53개소 70억원 ▲전남 자유농업 센터 건립 및 농산물 가공장업 활성화 79개소 37억원을 투입,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 선정 전략 마련

도·교육청 회의... 초·중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 등 모델 개발

전남도가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남형 교육발전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공모 준비 시·군 담당 과장과 23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남도와 도교육청의 '교육발전특구' 공모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시·군별 발전전략 및 특화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방안 등 전남의 특성을 반영한 특구 공모 주요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전남도와 도교육청은 전남의 특성을 반영한 ▲영유아·유보 통합 ▲초·중·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 ▲자립형공립고, 특성화고와 대학 연계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등의 교육발전특구 모델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특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사업, 글로벌 대학과의 협업 등 지역 대학

과의 연계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 교육청, 시·군, 지역 대학, 기업 등과 협약을 통해 지역협력체를 구성, 교육발전특구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강영구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산업·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초·중·고·대학교육을 담은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전략을 담아내는 것이 공모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도와 교육청, 시·군, 대학 등은 행정역량을 결집해 공모에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사업은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의 교육혁신과 인재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오는 2월 9일까지 1차 공모를 거쳐 3월 시범지역이 지정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